

# ‘의료질 평가지원금’ 호남권 차별

### 천정배 ‘배분 현황’ “상급·종합병원 35곳으로 7개 권역 중 4번째... 지원금은 46.4억 불과”

선택진료비 축소 정책에 따라 신설된 ‘의료질 평가지원금 제도’가 수도권에 집중돼 호남지역이 차별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당 천정배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지역별·종별 의료질 평가 지원금 배분 현황(2015년9월~2016년 4월)’에 따르면 전북과 광주, 전남의 상급·종합병원은 서울지역에 비해 지원금 차별을 받고 있다.

종합병원 수는 호남권이 35곳으로 7개 권역별 인천·경기(60곳), 서울(53

곳), 부산·울산·경남(41곳) 다음으로 많았다. 이어 대전·충청(30곳)과 대구·경북(27곳), 강원(12곳), 제주(7곳)가 뒤를 이었다.

하지만 의료질 평가지원금은 서울지역의 병원이 279억9,000만원을 지원받는데 반해 호남권은 46억4,100만원을 지원받는데 그쳤다.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병원 수가 적은 대전·충청(54억 9,000만원)과 대구·경북(54억7,000만원) 보다 적게 지원을 받고 있다. 상급병원이 현저히 적은 강원(17억

1000만원)과 제주(8억9000만원)를 제외하면 사실상 최하위다.

서울지역 다음으로 평가지원금을 많이 받는 지역은 종합병원 수가 많은 인천·경기(160억1,000만원), 부산·울산·경남(94억8,000만원) 순이다.

천 의원은 이에 대해 의료질 평가지원금 제도가 지역의 열악한 의료현실에 대한 고려 없이 서울 등 수도권 병원에만 일방적으로 유리한 지표로 설계됐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또 의료질 평가 연구자와 심의위원들이 수도권 병원의 목소리를 반영하

는 이들로 구성돼 있으며 진료량에 따른 지원금 배분 방식이어서 환자 수가 많은 수도권에 유리하게 평가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천 의원은 “의료 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지원금이 적게 배분되면 의료불평등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며 “수도권과 지방의 의료질을 동반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의 의료질 평가지원금의 일부는 지방의 열악한 의료환경 개선과 의료불평등 해소를 위해서 사용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민형 기자

## 새누리, 김영우 국감 참여 당혹

새누리당 김영우 국회 국방위원장이 27일 국감 보이콧 방침을 깨고 국감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히자 당 지도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김 위원장의 국감 참여 소식이 알려지자 긴급 최고위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다.

최고위는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의 국감 참여를 받아들이지 않고, 최대한 김 위원장을 설득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조원진 최고위원은 최고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김 위원장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모든 의원들이 그렇게 해서 안된다면 입장”이라며 “지금 국감위원들이 김 위원장을 설득하고 있으니 조만간 결론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김 위원장이 국감 진행을 강행하면 정국도 검토할 것”이라고 묻자 “그것은 추후에 보겠다”고 말했다.

이장우 최고위원은 “김 위원장이 개인적인 소신은 있을 수 있겠지만 당이 이런 상황에서는 옳지 못하다”고 했고, 강석호 최고위원도 “당론에서 정하지 전에 (참여 의사를 밝혔어야) 한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보였다.

앞서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당 소속 국회 국방위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저는 오늘 오후부터 국정감사에 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정세균 의장 사퇴를 위해 분투하시는 모든 의원님들께는 매우 송구한 마음”이라며 “저는 제가 생각했던 의회민주주의의 원칙에 따라 수백에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국회는 상임위 위주로 운영돼야 한다”며 “특히 각 위원회의 국정감사는 국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뉴스



인권증진 및 인권문화 확산을 위한 전라북도-국가인권위원회 업무협약식  
· 일시 : 2016. 9. 27(화) 14:00 장소 : 전북도청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위해 27일 오후 2시 도청 접견실에서는 송하진 도지사와 이성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및 관련인들이 참석하여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추구하는데 공동노력하고, 지역사회의 인권증진 및 인권문화 확산을 위해 협력하기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 긴급차량 양보 위반 3년 새 4배... 전북 최다

### 진선미 ‘단속 현황’ “2013년 98명 단속 48명 과태료 처분 → 2015년 368명 단속 218명 과태료”

전북지역의 도로 위 비양심 운전자가 가장 많다는 불명예를 안았다.

소방·구급차 등 화재와 인명구조현장에 출동하는 긴급차량에 통행을 양보하지 않아 단속된 비양심 운전자가 많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27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긴급차량 양보의 무 위반 단속 및 과태료 부과 현황’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13년~2016년 6월) 긴급차량 양보 위반 단속 운전자는 828명이고 이 중 60.1%인 498

명에게 2,41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2013년 98명이 단속돼 48명이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에 비해 2015년에는 368명이 단속돼 218명이 과태료 처분을 받아 비양심 운전자가 3년 새 4배가 늘었다.

지역별 과태료 대상자는 전북과 서울이 105명으로 가장 많았고, 충북 78명, 인천 69명 등 순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긴급차량이 접근한 경우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피해 진로를 양보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시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소방기본법에 따라 소방차 등 긴급차량의 진로를 악의적으로 방해한 운전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부과한다.

진선미 의원은 “긴급한 재난·사고 현장에 소방·구급차의 출동은 확보는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며 “일반 운전자들이 긴급차량에 통행권을 확보해 주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민형 기자

“30일에는 승용차 없이 출근해요”

전북도 ‘승용차 없이 출근하는 날’ 행사 추진

전북도가 ‘승용차 없이 출근하는 날’ 행사를 추진한다.

27일 도에 따르면 도는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저탄소생활 실천운동 일환으로 오는 30일을 ‘승용차 없이 출근하는 날’로 정했다.

참여 대상은 분청 및 직속기관 등 소속 공무원이며, 자가용 없이 대중교통 및 자전거를 이용하거나 도보로 출·퇴근해야 한다.

특히 행사 당일 출근 시간대(오전 6~9시)에는 주차장 출입을 통제하고, 주변 도로에 차량을 불법 주차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 홍보를 할 방침이다.

/고민형 기자

## 병실·수술날짜 부탁 못한다

### 병원들 ‘민원 차단’ 방침 “위독한 경우 부정청탁 아냐”

28일부터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이 시행되면 의료기관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일정조정, 입원일 부탁 등이 전면 금지된다.

국민권익위원회와 의료계에 따르면 28일부터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병원 입원을 앞당겨 달라고 부탁하거나 수술, 외래진료, 검사 등의 일정을 조정해주는 경우 부정청탁이 폐 처벌 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공공병원과 대학병원들은 이러한 청탁을 금지한다는 가이드라인과 내부방침을 세웠다.

또 시행 초기 적용 대상과 범위에 대한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병원들은 지인이나 환자들의 민원을 원칙적으로 차단하기로 했다. 정확히 어떤 행동이 저촉될 수 있는지 잘 모르니 일단 조심하고 보자는 분위기다.

서울대병원 관계자는 “전직원과 교수들을 대상으로 김영란법 교육을 하

고 관련 책자를 배포하고 있다”면서 “직원들은 김영란법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지만 환자들은 김영란법을 모르고 진료나 병실을 부탁할 수 있어 서로 조심하기 위해 안내문을 병원에 붙여놨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가이드라인대로 환자민원은 일절 안받기로 원칙을 세웠다”면서 “다양한 사례가 생여야 방향이 잡힐 것 같다. 시행 초기가 보니까 원칙적으로 안되는 것은 안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지역 민간병원들은 자체적으로 내부 규정을 만들어 부정청탁 등을 받았을 때 법적으로 처벌받진 않더라도 회사 내에서 징계는 내리도록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권익위는 최근 환자가 정말 위독한 경우에는 부정청탁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 위독한 등을 가장해 진료·치료 순서의 변경을 요청하는 건 위반이라고 명시했다.

권익위는 “환자가 위독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의학적 판단에 따라 접수 순서대로 하지 않더라도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있으므로 부정청탁이 아니다”고 밝혔다.

/뉴스

## 도, ‘자원순환 실천마을 조성사업’ 내년 확대·운영

전북도가 ‘자원순환 실천마을 조성사업’을 확대·운영한다.

27일 도에 따르면 올해 시범적으로 추진 중인 자원순환 실천마을 조성사업을 내년부터 확대·운영하기로 했다.

자원순환 실천마을은 마을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과 영농폐기물·입업부산물·어업폐기물 등을 최대한 재활용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구축하고, 자원 순환을 선도하는 일종의 테마 마을이다.

올해는 농촌과 산촌·어촌 등 유형별로 총 3개 마을에서 시범 운영했는데, 분리배출이 활성화되고, 마을환경

이 개선되는 효과가 나타났다.

이에 도는 내년부터 자원순환 실천마을 사업을 확대해 2018년까지 총 14개 마을에서 운영할 계획이다.

우선 내년에는 기본 하드웨어 구축과 마을유형별 특화사업으로 나눠 사업계획의 구체성과 주민의 참여도가 높은 마을을 선정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마을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원순환 시설을 설치하고, 마을리더 양성과 지속적인 주민교육을 통해 생활 속 자원순환 실천을 꾸준히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민형 기자

### 상속한정승인공고

망 조강석(1968. 7. 14.생 2013. 2. 15. 사망)의 재산상속에 대한 상속한정승인 신고가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김동관 판사의 심판으로 법원에 수리되어 민법 제1032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채권자 또는 수증자는 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청구인에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기일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 될 수 있습니다.

▶ 사건번호: 2016년 단193 상속한정승인 판사 김동관

▶ 피상속인: 망 조강석(1968. 7. 14.생 2013. 2. 15. 사망)

최후주소: 부안군 부안읍 무풍로 127 1동 201호(봉덕리, 전원빌라)

▶ 공고인: 조안숙, 조강수, 조광현, 조안순

▶ 한정승인수리일: 2016. 7. 7

▶ 공고기간: 2016. 9. 19. ~ 2016. 11. 18.

▶ 연락처: (청구인 조안숙의 주소지)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사직동 254-15번지

##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전주매일의 창간 8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 군산 애독자 일동 -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ijmaeil.com